딱 맞는 풀이집

법과 사회

I 개인 생활과 법

01 가족관계와 법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0쪽

01 ×	02 ○	03 ○	04 ○	05 협
06 재	07 협	08 권리 능력		09 입양 신고일
10 친양자	11 인지	12 가정 법원		13 최근의
14 유증	15 된다	16 공동	17 유류분 제도	

01 혼인 신고는 우리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요구되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0~14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⑤		

서답형 문제

17 (1) 성년 의제 (2) 모범 답안 A는 양자로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B는 친양자로서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또한 A는 입양 후에도 성과 본이 변하지 않지만, B는 입양된 시점부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 (1) 친생자, 제1순위 (2) 모범 답안 정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법으로 보장하여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01 혼인의 성립 요건 답 ⑤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당사자 모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혼인 가능한 연령에 해당해야 하는데,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02 성년 의제 답 ③

ㄴ. 혼인을 하면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가 발생한다. ㄷ. 갑과 을은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갑의 채무도 을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잡기 ㄱ. 미성년자가 적법하게 혼인 신고를 하면 성년 의제가 적용되므로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한번 발생한 성년 의제의 효력은 이혼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03 혼인과 이혼 답 ③

정과 무는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 상속권은 오직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무는 정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바로잡기 ①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② 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나 법적 사유로 결정되는 것으로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친족 관계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에서만 발생한다. 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법률혼이지만, 정과 무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므로 법적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가 있다.

04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답 ④

㉠은 두 배우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 ㉡은 당사자 일방이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④ 면접 교섭권은 이혼 방식과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된다.

보충 + 심화 이혼의 유형

협의 이혼	• 당사자 간 합의 및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함. • 숙려 기간을 거침(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재판상 이혼	• 이혼 조정 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함. • 가사 조사 및 조정 기간을 거침. •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함.

05 태아의 권리 능력 답 ④

민법상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태아의 보호를 위해 상속이나 유증,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태아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잡기 ㄷ. 태아 상태에서는 부모가 대리하여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06 친자 관계 답 ②

질문에 따라 분류하면 A는 친생자, B는 친양자, C는 양자이다. 친양자(B)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 법원에서 입양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선택지 분석

① A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한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③ C는 입양한 날부터 양부모의 성으로 변한다.
→ 양자는 입양 후에도 양부모의 성으로 변하지 않는다.

④ B와 C 중 양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B뿐이다.
→ 친양자와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법정 혈족으로서 자녀의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 사망 시 모두 상속인이 된다.

⑤ B와 C는 입양 후에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친양자는 입양 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07 친양자 답 ⑤

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모와의 상속 관계는 소멸한다. 정. 친양자 입양은 가정 법원의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미성년자만 입양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

바로잡기 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을. 친부로부터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08 친권 답 ③

㉠은 친권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 정한다.

바로잡기 ①, ④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 공동이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부모가 사망, 친권 상실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 기관인 가정 법원에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09 가족관계와 법 답 ④

ㄴ.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A는 을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을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다. ㄹ.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이다. A는 입양 당시 성년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잡기 ㄱ. 갑과 을은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협의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ㄷ. 갑과 병이 재혼하였다고 해서 병과 A 사이에 자동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둘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려면 병이 A를 입양해야 한다.

10 가족관계와 법 답 ①

제시된 설명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갑이다. A와 B가 혼인할 당시, B는 18세로 미성년자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성년 의제 적용을 받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A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 B, 친양자 D, 혼인 중 출생자 E가 법정 상속권을 갖는다.

바로잡기 ㉡으로 인해 C와 D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혼인 중 출생자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11 사망 답 ③

우리나라 민법상 사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인 심폐 기능 정지 시를 사망 시기로 본다.

바로잡기 ① 우리나라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존엄사가 가능하며,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사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생사 불명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했을 개연성이 큰 경우,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다. ⑤ 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 통보에 따라 사망 여부를 결정한다.

12 유언 답 ②

갑은 법적 절차를 거쳐 유언을 남겼으므로, 갑이 사망하는 순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유언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증이 가능하다. ③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을 통해 특정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④ 병은 법적 절차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으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체장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의 유언은 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나, 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유언과 상속 답 ③

갑에게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정이 있는 경우, 정은 1순위 공동 상속인이다. 그러나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정이 소외되었으므로,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로 유언 내용,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 작성 날짜를 직접 쓰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이나 지장으로 날인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현재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을, 병이 있으므로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 ④ 우리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⑤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될 경우, 기존 유언과 나중에 작성된 유언의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

14 법정 상속 순위 답 ④

①, ② 갑 사망 시, 배우자 을과 친생자 A 및 친양자 B는 모두 제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③ 병이 사망했을 때, 병의 친생자인 C와 재혼한 배우자 을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⑤ 을은 C를 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C와 친생부모 중 한 명인 정 사이의 친족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C가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C의 직계 존속인 정(친생부모)과 을(양부모)이 공동으로 C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④ 병이 을과 재혼했더라도 병이 A와 B를 입양했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병과 법적 친자 관계가 있는 C만 병의 상속인이 되며, A와 B는 병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 ✿ 심화 **법정 상속 순위**

제1순위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15 상속 답 ④

갑의 사망에 따라 친생자 을과 인지 절차를 거친 정이 법정 상속인이 된다. 동일 순위 상속인들은 1:1의 비율로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을과 정이 각각 1억 원씩 상속받는다. 병은 갑과 사실혼 관계이므로, 현행법상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속 지분은 0원이다. 무는 직계 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이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 을과 정이 존재하므로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 상속 지분은 0원이다.

16 상속 답 ⑤

ㄱ은 단순 승인, ㄴ은 상속 포기, ㄹ은 한정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잡기 ㄷ.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다만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 항목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특정 재산만을 골라 상속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가족관계와 법

(2) 〔주요 키워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성(姓)과 본(本), 양자, 친양자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A와 B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상
〈조건〉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A와 B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A는 양자, B는 친양자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18 친자 관계와 상속

(2) 〔주요 키워드〕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지분 보장, 생존권 보호

채점 기준	배점
유류분 제도를 쓰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유류분 제도를 쓰고, 그 취지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유류분 제도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5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1 이혼 답 ④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이혼 시 행사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을이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협의 이혼에 대한 설명이다. ②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을은 병의 양육자인 갑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02 가족관계와 법 답 ④

ㄱ.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정의 사망 시, B는 병(배우자)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만약 정의 유언에 의해 병이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B는 병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는 병에게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인 갑, 을과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병은 A의 양부이며, B는 병의 친양자로서 A와 법정 혈족 관계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갑, 을, 병, B는 모두 민법상 A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ㄷ. 입양을 통해 양자가 된 A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입양 당시 A는 이미 19세(성년)이므로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03 가족관계와 법 답 ③

갑이 병과 재혼하더라도 병의 자녀인 C를 별도로 입양하지 않는 한, C는 갑의 법률상 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갑이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병과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A, B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선택지 분석

① (가)의 경우 갑은 A, B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갑은 이미 성년이므로 (가)와 같이 재혼할 때 부모인 A,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가)의 경우 갑은 C를 인지하여 C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갑은 C의 생부가 아니므로 인지를 할 수 없으며, 재혼만으로는 C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나)의 경우 갑에 대한 친권은 D, E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 갑은 이미 성년이므로, D와 E가 갑을 입양하더라도 성년인 갑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나)의 경우 갑의 성과 본은 D 또는 E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된다.
→ 갑은 성년이므로 양자로 입양만 가능하다.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한다.

04 친자 관계와 상속 답 ⑤

① 갑의 사망 당시 친생자인 A, C는 상속인이며, 일반 입양된 B 역시 갑의 자녀로서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순위를 가지므로 갑의 상속인이다. ② B는 친부 병과 여전히 친족이며 양부 갑과 친모 을 사이에서 태어난 C와는 법정 형제자매 관계로서 친족에 해당한다. ③ B는 입양 당시 이미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인 성년이었으므로 친권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어머니인 을이 B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④ 갑은 B를 입양함으로써 B와 친족이 되고, 을은 법률혼 배우자인 갑의 친생자 A와 인척 관계(계모-자녀)가 되어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A는 갑의 친생자일 뿐 을이 입양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갑과 을이 이혼할 때 A는 친권자 지정 협의나 법원의 직권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다.

02 계약과 불법행위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8쪽

01 ○ 02 ○ 03 ○ 04 × 05 무 06 취
07 취 08 해 09 고의, 과실 10 인과 관계
11 금전 배상 12 정신적 13 특수 불법행위
14 연대하여 15 점유자 16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04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8~22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⑤

서답형 문제

17 (1) ㉡ (2) 모범 답안 정과 병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반면, 갑과 병의 계약에서는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를 써서 병이 이를 믿게 하였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8**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 형벌적 **19** 모범 답안 최종 책임 주체는 을이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점유자인 갑이 책임을 지지만, 갑은 수개월 전부터 보수를 요청하는 등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면책된다. 따라서 이차적으로 소유자인 을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01 계약의 의미와 원칙 답 ③

'이것'은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지, 누구와 체결할지,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할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취소, 해제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해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거나 장래를 향해 종료시킬 수 있다. ②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④ 계약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하다. 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02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답 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의사 표시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잡기 을.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계약 내용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03 계약의 무효와 취소 답 ①

A는 무효, B는 취소에 해당한다. ㄱ.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사유이다. ㄴ.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ㄷ. 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ㄹ. 무효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법률 효과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

보충 + 심화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 불공정한 법률 행위 •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계약의 취소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 •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맺은 계약

04 미성년자의 계약 답 ④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병은 정에게 책값을 줄 의무와 책을 받을 권리가, 정은 병에게 책을 건네줄 의무와 책값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바로잡기 ① 갑은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② 게임기기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갑과 갑의 부모에게만 있다. ③ 중고 물품 거래도 계약에 해당한다. ⑤ 병과 정의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한 때부터 성립한다.

05 미성년자의 계약 답 ⑤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택지 분석

① 미성년자가 직접 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부모님만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제한 능력자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직접 매장에 가서 계약서에 날인하고 돈을 냈다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날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한 경우라도 미성년자라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동의를 받은 후에는 미성년자임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06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 답 ⑤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근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07 계약의 해제 답 ②

㉠에 들어갈 용어는 해제이다. 해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미리 정해 둔 사유가 있는 약정 해제나, 채무 불이행과 같이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법정 해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 표시이다. ③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④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에 해당한다. 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긴다.

08 계약의 무효 답 ①

제시된 계약은 상대방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맺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잡기 ㄴ. 무효는 별도의 판결이나 절차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ㄷ.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계약서 작성 여부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09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답 ④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④ 불법행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만 존재해도 성립한다. A가 B를 다치게 할 의도(고의)가 없었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주의 의무 태만(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는 B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10 불법행위와 정당방위 답 ⑤

갑의 행위는 을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상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손해배상 답 ③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문이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문의 게재 등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신체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도 포함된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후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가해 행위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를 범위로 한다.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인 위자료도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12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과 과실 상계 답 ②

㉠은 과실 상계, ㉡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과실 상계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은 위험한 시설 또는 물질을 관리·지배하는 자가 고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시설이나 물질 때문에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답 ③

제시된 사례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ㄴ. 갑이 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갑에게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동물 점유자인 정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된다.

선택지 분석

ㄱ. 을에게 고의가 없으면 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을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병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ㄹ. 무는 정의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을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동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현재 동물을 직접 관리하는 점유자인 정이다. 동물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이 없으므로, 무가 무조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보충 + 심화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등의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짐.
사용자의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공작물 등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일차적으로 점유자가,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배상 책임을 짐.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짐.

14 특수 불법행위의 면책 규정 답 ④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 중 동물 점유자의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 점유자의 책임,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가해자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의무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④ 공동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별도의 면책 규정이 없다.

15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답 ④

① 병과 을은 승마 체험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을은 병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을은 불법행위 책임과 별개로 채무 불이행 책임도 질 수 있다. ② 동물 점유자인 을이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③ 공작물 책임에 있어 점유자인 을이 주의 의무를 다하여 면책될 경우, 소유자인 갑이 공작물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④ 정은 자신의 과실(안전 수칙 미설명)로 인해 직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이므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주이자 점유자인 을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6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답 ⑤

A와 B는 공모하여 손해를 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 직접 사고를 낸 택배 기사 C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를 고용한 D는 피용자의 사무 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A, B, C, D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17 계약

(2) 〔주요 키워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취소, 속임

채점 기준	배점
갑과 정의 취소 가능 여부를 모두 쓰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갑과 정의 취소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썼으나, 그 근거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갑은 취소할 수 없고 정은 취소할 수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19 특수 불법행위

〔주요 키워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점유자, 일차적 책임, 면책, 소유자, 이차적 책임, 무과실 책임

채점 기준	배점
최종 책임 주체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최종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썼으나 그 근거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최종 책임 주체는 을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23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1 계약 답 ④

갑이 정해진 날짜까지 대여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갑과 을의 계약은 (나)에서 성립한다. ② (나)에서 갑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③ (나)에서 갑에게는 대여를 받을 권리와 대여료를 지불할 의무가, 을에게는 포토 부스를 설치할 의무와 대여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⑤ (다)에서는 이미 을이 포토 부스를 설치하여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두 배를 주어도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02 미성년자의 계약 답 ④

①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인 무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갑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을은 무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③ 무가 미성년자인 갑과 계약한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면, 상대방인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과의 계약은 무가 취소할 수 없다.

④ 병과의 계약은 갑이 아무런 대가 없이 표를 받는 것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무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0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답 ⑤

ㄱ. 병이 정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이 B에 대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C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C의 법정 대리인인 D는 A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잡기 ㄷ. C가 A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였어도, A는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04 계약과 불법행위 답 ③

ㄴ. B는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판매자인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ㄷ. 갑이 A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 대리인 B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확답 촉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A는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ㄹ. 병에 대한 미성년자 A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의 법정 대리인인 B는 병에게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인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03 물권의 행사와 한계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26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부동산 08 을구 09 등기 사항 증명서 10 임대차 11 물권
12 〈주택 임대차 보호법〉 13 대항력

02 개인의 소유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된 시기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이다.

04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26~30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5 ⑤ 06 ③
07 ② 08 ① 0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⑤ 14 ④ 15 ① 16 ④ 17 ②

서답형 문제

18 (1)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2) 모범 답안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믿음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권리 행사의 일반 원칙이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외형상으로는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익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9** (1) 공시 (2) 모범 답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하여 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속인 뒤, 보증금 변제를 구실로 경매 대금을 가져가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01 소유권 답 ③

ㄴ.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제삼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다. ㄷ. 소유권은 채권과 달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정한 종류와 내용만으로 강제된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바로잡기 ㄱ. 개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이다. ㄹ.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유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02 물권과 채권 답 ②

㉠은 물권, ㉡은 채권, ㉢은 강행 규정, ㉣은 임의 규정이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03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답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질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일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04 신의 성실의 원칙 답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믿음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제시된 사례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05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답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다. 신의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사회적 관점에서 제한하고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바로잡기 갑. 사유 재산권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진 원칙이다. 을.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다.

보충 + 심화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06 공시 답 ③

ㄴ. 전세권은 대표적인 물권으로, 제삼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공시 대상이다. ㄷ.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동산이지만 가치가 크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처럼 공적 장부를 통해 관리한다.

바로잡기 ㄱ. 물권은 공시 제도의 대상이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시 대상이 아니다. ㄹ.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07 물권의 종류 답 ②

(가)의 권리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다. (나)의 권리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채 담보로 설정하여, 채무 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이다. (다)의 권리는 동산을 채권자에게 맡기고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인 질권이다.

보충 ✪ 심화 **소유권과 점유권**

구분	소유권	점유권
의미	물건을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태
대상	부동산, 동산 모두	물건(주로 동산의 공시 방법)
사례	책을 친구에게 빌려준 주인	빌려온 책을 읽는 친구

08 부동산과 동산

답 ①

ㄱ.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의로 성립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ㄴ. 소유권 변동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바로잡기 ㄷ.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ㄹ. 모든 물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인 ㉠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자동차인 ㉡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커서 예외적으로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다.

09 공시

답 ⑤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크고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국가가 공적 장부로 관리하는 등록 제도를 운용한다.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은 매매한 후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가족 간의 사적 거래나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0 등기부

답 ④

갑은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이 기재된 표제부를, 을은 소유권 관련 내역이 기재된 갑구를, 병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 을구를 확인하였다.

11 부동산 매매

답 ②

①,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 그리고 경매 시 배당 순위를 결정짓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는 모두 을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④ 우리 법상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건물 등기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⑤ 실제 거래 상대방이 갑구에 기재된 정당한 소유자인지 대조하는 과정은 부동산 계약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② 저당권은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공시하는 물권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단순히 점유 현황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부의 을구를 통해 저당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12 등기 사항 증명서

답 ③

등기 사항 증명서는 등기 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자료로, 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건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구성된다.

제시된 자료의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주택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갑(김○○)이 채권자인 을(이××)에게 돈을 빌리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바로잡기 ① 갑은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택의 설계자는 알 수 없다. ② 주택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았다. ④ 을은 갑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등기 사항 증명서는 물권을 공시하는 장부이다.

13 임대차

답 ⑤

㉠은 임대차 계약이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가진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양측은 서로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바로잡기 ①, ②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에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④ 갑에게는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을에게는 월세를 받을 권리와 주택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부여된다.

14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답 ④

ㄴ.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계약서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ㄹ.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인이 고액 체납자라면 경매 시 조세 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를 통해 주택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와 같은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 분석

ㄱ. 갑이 을과의 계약 직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대항력 취득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로 발생한다.

ㄷ. 갑이 을과 계약할 때 '갑의 동의하에 을이 주택을 매매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 임대인의 주택 매매를 임차인의 동의 사항으로 제한하는 특약은 소유권자의 처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타당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보충 ✪ 심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 등록(전입 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 기간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최소 2년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음.
확정 일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15 대항력 답 ①

㉠은 대항력이다.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 등록(전입 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할 수 있다.

16 확정 일자 답 ④

제시된 자료는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이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주택 경매 시 매매 대금에서 확정 일자 이후의 저당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다.

바로잡기 ①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다. ③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이 서류에 기재되지 않는다.

17 임대차 답 ②

ㄴ.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ㄹ.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하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ㄱ.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 시 낙찰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잔액이 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ㄷ. 전세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하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18 근대 민법의 원리

(2) 〔주요 키워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믿음, 신의, 공공복리, 권리 행사 제한

채점 기준	배점
두 원칙의 명칭을 쓰고, 각 원칙의 의미를 주요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두 원칙의 명칭을 쓰고, 각 원칙의 의미를 주요 키워드의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중
두 원칙의 명칭만 서술한 경우	하

19 임대차

(2) 〔주요 키워드〕 담합, 이해관계인, 권리 침해 보호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키워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요 키워드 두 가지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중
주요 키워드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31쪽

01 ① 02 ⑤ 03 ②

01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답 ①

ㄱ.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므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2026년 4월 15일에 돈을 빌려준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ㄴ.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병은 2026년 12월 10일에 A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므로 해당일에 임차권을 취득한다.

바로잡기 ㄷ. 병의 권리는 임차권인 채권이므로,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ㄹ. 병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병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 을이 존재하므로 경매 대금에서 을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02 부동산 매매 답 ⑤

(가)~(라)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① (가)에서 갑과 을은 계약과 동시에 서로에게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② (나)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단계이다. 을은 (나)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다)는 잔금을 치르는 장면이다. 우리 민법상 잔금을 완납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라)에서 최종적으로 등기를 마쳐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 변경이 기재되어야 권리 취득이 완료된다. ⑤ (가)~(라)에서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갑과 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이다.

03 등기 제도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답 ②

임차인 을은 2순위 권리자로서, 3순위인 B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의 저당권자 A 은행은 2025년 3월 1일에 설정되어 1순위가 된다. 임차인 을은 2025년 10월 15일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갖추었으므로 익일인 10월 16일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여 2순위가 된다. B 은행은 2026년 2월 1일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3순위이다. 따라서 을은 B 은행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다.

바로잡기 ① 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③ 경매 대금이 선순위 채권액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한 7,00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을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 ④ 저당권은 제삼자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다. ⑤ 경매 절차 완료에 따른 소유권 변동 사항은 갑구에 기재된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32~3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① 06 ⑤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②

서답형 문제

16 (1) 모범 답안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의사 표시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약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2) 모범 답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가 있다. **17** (1) 아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모범 답안 사례에 나타난 불법행위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부모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이다. 감독 의무자가 보호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01 혼인 답 ④

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병이 무를 인지하면 법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무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바로잡기 ㄱ. 미성년자인 갑과 을은 혼인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공법에서는 성년의 기준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판단한다. ㄷ. 병과 정 사이에는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02 혼인의 법률 효과 답 ⑤

① 혼인을 하면 부부 사이에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발생한다. ② 혼인으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③, ④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부 일방의 명의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부부 별산제 적용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얻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일방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03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답 ⑤

갑과 을은 협의 이혼,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전에 반드시 가정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잡기 ①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협의 이혼 시에는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③ 병과 정의 이혼에서 정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병은 정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은 병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산 분할 청구권은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04 친자 관계 답 ⑤

① 갑과 을이 이혼하였어도 자녀인 B와 갑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더라도, B는 직계 비속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② ㉠이 양자와 친양자 중 어느 경우이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친양자라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A는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④ ㉠이 양자라면,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A는 양부모인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진다.
⑤ 친양자는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친양자로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A는 을과의 법적 관계가 소멸되므로,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05 유언과 상속 답 ①

ㄱ.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된다. 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제시된 사례의 유언은 민법이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다. 따라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들이 1:1의 비율로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선택지 분석

ㄷ. 갑이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도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유언은 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지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갑이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자녀들이 평소 갑에게 소홀히 하여 실망시킨 점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을 상실한다.
→ 우리 민법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홀히 한 점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갑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06 가족관계와 법 답 ⑤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바로잡기 ① 성년 의제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② E는 A와 B에게 친양자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인 D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③ B가 사망하면, B의 친생자인 C와 친양자인 E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F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상속권이 없으며, 친모 G는 제2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 순위에서 밀려난다. 따라서 자녀 C와 E가 균등한 비율로 각각 3억 5천만 원씩 재산을 상속받는다. ④ (나)에서 C는 법률혼 관계인 A와 B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이다. 따라서 A와 C 사이의 친자 관계는 자동으로 형성된다.

07 계약의 성립 답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 표시가 합치될 때 성립한다. ㉡은 을이 구체적인 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제안했으므로 유효한 청약이고, ㉢은 승낙에 해당한다. 계약은 구두만으로도 성립하며,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08 계약의 해제 답 ④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⑤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분된다.

09 계약의 무효와 취소 답 ⑤

ㄷ. 미성년자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ㄹ.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을 갖춘 성인이 체결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바로잡기 ㄱ.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ㄴ.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10 미성년자의 계약 답 ③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를 쓴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바로잡기 ① (가)의 경우, 갑과 갑의 부모님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나)의 경우, 갑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와 (다)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가)의 경우,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답 ⑤

ㄷ. ㉢은 특수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이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그 예에 해당한다. ㄹ. ㉠은 과실, ㉡은 손해배상이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조정하는 과실 상계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잡기 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중 한 가지만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리 민법은 실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법령에서만 도입되었다.

12 특수 불법행위 답 ②

타인을 사용하여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선택지 분석

① 갑과 을 사이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 갑과 을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이므로, 갑에게는 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③ 을은 학생 신분이므로 병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을은 21세인 성년자이므로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갑이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한다.
→ 갑이 병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더라도, 직접적인 행위자인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갑은 책임 능력이 부족한 을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을은 21세인 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다.

13 물권 답 ⑤

㉠은 질권, ㉡은 저당권에 해당한다. ①, ② 질권은 주로 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권이며,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여 공시한다. ③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권이며, 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되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④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질권자와 저당권자 모두 해당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질권자와 저당권자 모두 담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임대 등)을 얻을 권리는 없다.

14 부동산에 대한 권리 답 ③

채무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최고액의 범위에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무액 변동 시마다 등기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15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답 ②

ㄱ.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5월 1일 전입 신고 시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5월 3일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잡기 ㄴ, 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16 계약

(1) 〔주요 키워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 적법하고 실현 가능,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키워드 중 세 가지를 포함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요 키워드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서술한 경우	중
주요 키워드 중 한 가지를 포함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임금 청구 행위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키워드 중 세 가지를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요 키워드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를 서술한 경우	중
주요 키워드 중 한 가지를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를 서술한 경우	하

17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2) 〔주요 키워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법정 감독 의무자, 보호 및 감독 의무 소홀

채점 기준	배점
불법행위의 유형과 배상 책임의 주체 및 요건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불법행위 유형과 배상 책임의 주체를 정확하게 썼으나 배상 책임의 요건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II 국가 생활과 법

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40쪽

01 ×	02 ○	03 현	04 근	05 고	06 현
07 고	08 근	09 실질적	10 형식적	11 실질적	
12 국정 통제		13 대통령	14 행정부		

01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이념 또는 제도이지만, 수적 우세를 내세워 소수의 구성원에게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40~44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①	10 ⑤	11 ⑤	12 ①
13 ②	14 ③	15 ②	16 ④		

서답형 문제

17 (1) 모범 답안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지고, 농민, 여성, 노동자 등은 참정권을 갖지 못한 제한된 민주주의이다.
(2) 모범 답안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18** 모범 답안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법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므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법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01 민주주의의 의미 답 ③

㉠은 '민주주의'이다. ㄴ, ㄷ.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 또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잡기 ㄱ.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이나 귀족정에 대한 설명이다. ㄹ. 민주 국가에서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때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라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02 법치주의의 의의 답 ②

제시문의 '이것'은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법을 근거로 행해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법치주의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행정이나 재판도 법률에 따라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통치하여 대표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이다.

바로잡기 ①, ④ 대의제와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이다. ③ 인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⑤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이다.

03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답 ④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였고,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은 성인 남자로 한정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행해졌으므로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⑤는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③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 중에 추첨제와 윤번제로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04 사회 계약설 답 ②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로, 이들은 모두 사회 계약론자이다. ㄱ, ㄹ. 사회 계약론자는 개인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본다.

선택지 분석

ㄴ. 공동체의 질서를 개인의 권리보다 중시하였다.
→ 사회 계약설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중시한다.

ㄷ. 국가 권력은 자발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므로 무너뜨릴 수 없다.
→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통치권을 군주에게 완전히 양도했다고 보았다.

보충 ⇔ 심화 사회 계약설

홉스	•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자연권: 통치자에게 전부 양도 • 정치 체제: 절대 군주제
로크	• 자연 상태: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이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함. • 자연권: 통치자에게 일부 위임 • 정치 체제: 입헌 군주제(저항권 인정)
루소	•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 • 자연권: 양도 불가 → 일반 의지에 의한 정치 공동체 구성 • 정치 체제: 민주 공화정

05 시민 혁명 답 ④

① 영국 명예혁명으로 승인된 권리 장전은 입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미국 독립 선언에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③ 프랑스 혁명은 절대 군주제와 봉건적 신분 질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⑤ 시민 혁명의 결과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부가 나타났고,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

④ 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보통 선거 제도는 20세기 중반에 확립되었다.

06 참정권 확대 운동 답 ④

A는 차트스트 운동, B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시민 혁명 직후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성인 남성에게만 인정되던 참정권을 노동자에게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발달하였지만, 시민 혁명을 자본가 계층이 주도하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잡기 ① 시민 혁명의 결과 대의제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② 대의제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③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⑤ 직접 민주 정치에서 중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제시된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은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07 민주주의의 발전 답 ③

(가)는 근대 민주 정치, (나)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다)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ㄴ. ㉠은 민회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은 민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였다. ㄷ.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실시되고 있다.

선택지 분석

ㄱ. (가)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
→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므로 모든 성인에게 공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ㄹ. (가)는 (다)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 입헌주의는 모든 국가 운영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성립하여 현대 민주 정치에서도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08 법치주의의 유형 답 ②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어떤 법이라도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므로 독재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바로잡기 ①은 실질적 법치주의, ③, ④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법치주의는 권력 분립 제도를 기초로 한다.

보충 + 심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됨.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법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에 더 부합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음.

09 법치주의의 유형 답 ①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제정의 절차적 합법성만 충족하면 법의 내용이나 목적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다수의 횡포나 합법적 독재에 악용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과 내용의 정당성까지 함께 강조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에 더 가깝다.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권력 행사가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나, 내용의 정당성까지 함께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

① 법치주의는 법률에 따른 지배를 의미한다.

10 법치주의의 유형 답 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ㄷ.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인 위헌 법률 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를 부정한다.

바로잡기 ㄱ. 갑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라고 보고 있다.

11 입법부의 권한 답 ⑤

(가), (나)는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에 해당한다. ㄴ. (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한 것이다. ㄷ, ㄹ. (나)는 국회가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 사법부를 견제한 사례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

바로잡기 ㄱ. (가)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으로 국정 통제 권한이다.

12 대통령의 사법부 견제 권한 답 ①

㉠은 대통령, ㉡은 사법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13 국가기관의 권한 답 ②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법원이다. ㄱ. ㉠은 '행정부'이다. ㄷ. 국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바로잡기 ㄴ. 대통령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 위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등의 임명권을 통해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ㄹ.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다. 행정 재판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14 우리나라 국기기관 간 견제 권한 답 ③

을. 국회는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조

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병.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를 견제한다.

바로잡기 갑.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 등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 권한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15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 견제 권한

답 ②

① 행정 재판권은 행정청이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다툼 등을 해결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③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검토하여 확정해 주는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④, 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과 법관 탄핵 소추 의결권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권한이다.

② 감사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이다.

16 우리나라 국기기관 간 견제 권한

답 ④

(가)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나)는 국회의 국정 감사 활동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다)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라)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으로,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권한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④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권한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17 현대 민주주의

(1) [주요 키워드]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성인 남성, 농민, 여성, 노동자, 참정권 제한, 제한된 민주주의

채점 기준	배점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점과 농민, 여성, 노동자 등은 참정권을 갖지 못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일부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제한되었다고만 서술한 경우	중
제한된 민주주의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채점 기준	배점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상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8 형식적 법치주의

[주요 키워드] 합법적 절차, 법적 정당성 인정, 합법적 독재, 독재 정당화

채점 기준	배점
합법적 절차에 의한 통치만 강조하여 법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독재 정치를 정당화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45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1 민주주의의 발전

답 ②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근대 민주 정치, C는 현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② 입헌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성립하였다.

선택지 분석

① A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모든 성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현대 민주 정치이다.

③ B에서는 A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 여성의 참정권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 모두 제한되었다.

④ C와 달리 A는 국민 주권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국민 주권론에 바탕을 두는 것은 근대·현대 민주 정치이다.

⑤ A~C 모두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 사회 계약설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02 법치주의의 유형

답 ⑤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합법적인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바로잡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둘다 중시한다. ㄴ.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03 법치주의의 유형

답 ②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 작용뿐만 아니라 사법 작용도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로잡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실질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04 국가기관 간 견제 권한

답 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법원이다. ㄷ. 법원은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ㄹ.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대통령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행정 재판권은 행정청이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다툼 등을 해결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 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02 우리나라 헌법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48쪽

01 ○	02 ×	03 ○	04 ㄱ	05 ㅂ	06 ㄴ
07 ㄹ	08 사회권	09 참정권	10 청구권	11 자유권	
12 상대적·실질적		13 공공복리		14 법률	

02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48~52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③	16 ②		

서답형 문제

17 (1) (가) – 국민 주권주의, (나) – 국제 평화주의 (2) 모범 답안 (가) –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공무 담임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제 실시 등, (나) –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존중 등

18 모범 답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 모범 답안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01 헌법의 특징 답 ②

제시문은 헌법의 최고성과 관련된다. ㄱ, ㄹ. 헌법은 국가 최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하위법은 헌법에 반하여 제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바로잡기 ㄴ. 헌법의 사회 통합 기능이다. ㄷ. 헌법의 조직 수권 규범 기능이다.

02 헌법의 권력 제한 규범 기능 답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이 각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간 권력 분립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력 제한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03 자유 민주주의 답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권력 분립 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①, 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②, ④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③ 국민 투표권과 공무 담임권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04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②

(가)는 복지 국가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ㄱ, ㄹ은 복지 국가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ㄴ, ㄷ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05 복지 국가 원리 답 ③

A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 원리'이다. 복지 국가 원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실현 방안으로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사회권 보장,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등이 있다. 관련 헌법 내용 중 두 번째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헌법 원리이다.

선택지 분석

① A에 '국민 주권주의'가 들어갈 수 있다.
→ A에는 복지 국가 원리가 들어갈 수 있다.

② A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A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복지 국가 원리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원리이므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⑤ (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가 들어갈 수 있다.
→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이다.

06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④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문화 국가 원리, (다)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ㄱ. 조약과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 존중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ㄴ.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은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ㄷ. 평화 통일 지향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바로잡기 ㄹ.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존중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07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④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은 자유 민주주의, ㉡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복수 정당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08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③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과 ㉢은 자유 민주주의, ㉡은 평화 통일 지향, ㉣은 복지 국가 원리, ㉤은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③은 문화 국가 원리와 관련된다.

09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답 ④

제시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ㄱ, ㄹ.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원리이고,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바탕이 되며,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로잡기 ㄷ.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10 자유권과 청구권 답 ③

㉠은 자유권, ㉡은 청구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적·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선택지 분석

① ㉠ – 근로의 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② ㉠ – 헌법에 열거된 권리만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이다.
→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인 포괄적 권리이다.

④ ㉡ – 초국가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 자유권,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보충 ✪ 심화 기본권의 성격

포괄적 성격	• 의미: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 천부 인권적 권리 • 종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열거적 성격	• 의미: 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보장되는 권리 • 종류: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11 평등의 의미 답 ④

㉠은 절대적·형식적 평등, ㉡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이다. ① 절대적·형식적 평등의 예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의 투표권을 한 표씩 제공하는 것이 해당한다. ② 우리 헌법상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③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예로는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해당한다. ⑤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차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④ 실질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실현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범주와 내용이 다르다.

12 참정권과 사회권 답 ⑤

A는 참정권, B는 사회권이다. ㄷ, ㄹ. 참정권과 사회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바로잡기 ㄱ.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는 참정권이다.

13 사회권 답 ④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권으로, A는 사회권이다. ①, ⑤ 사회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빈부 격차의 심화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현대적 권리이다. ②, ③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고, 열거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국가를 전제로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정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다.

14 기본권의 유형 답 ②

국가 이전의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이며, 국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A는 평등권이다. 따라서 B는 자유권이다.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D는 참정권이다. ㄱ. 평등권, 자유권은 천부 인권적·핵심적·본질적 권리이다. ㄷ. 사회권과 참정권은 국가의 입법에 의해 내용이 확정되고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인 국가 내적 기본권이다.

바로잡기 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인 청구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들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평등권과 자유권 모두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ㄹ. 사회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기본권의 제한 답 ③

제시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의 실정권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다. ② ㉡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다. ④ ㉢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해당하며,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 준다.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⑤ 헌법에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국가 권력이 기본권 제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6 과잉 금지의 원칙 답 ②

ㄱ, ㄹ.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상 정보 등록으로 인해 범죄자가 입는 불이익(사익)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안전(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유권에 해당하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ㄷ. 헌법 소원 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보충+심화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 수단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어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17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

(2) [주요 키워드]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공무 담임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복수 정당제,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존중 등

채점 기준	배점
국민 주권주의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을 각각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국민 주권주의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 중 각각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국민 주권주의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8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주요 키워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법률, 제한

채점 기준	배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기본권 제한의 요건만 서술한 경우	중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9 과잉 금지의 원칙

[주요 키워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채점 기준	배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5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1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④

A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이다.

바로잡기 ① 문화 국가 원리이다. ② 복지 국가 원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 원리이다. ⑤ 국제 평화주의이다.

보충+심화 헌법의 기본 원리의 실현 방안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공무 담임권 등),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제 등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권력 분립 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등
복지 국가 원리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등
문화 국가 원리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평생 교육의 진흥을 위한 책무 등
국제 평화주의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존중 등
평화 통일 지향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등

02 자유권 답 ①

A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해당된다.

바로잡기 ㄷ.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경우 자유권 역시 법률로써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03 헌법의 기본 원리 답 ③

(가)는 문화 국가 원리, (나)는 복지 국가 원리이다. ㄴ. 문화 국가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ㄷ. 복지 국가 원리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의무를 규정한다.

바로잡기 ㄱ. 평화 통일 지향과 관련된다. ㄹ.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는 복지 국가 원리이다.

04 평등권과 청구권 답 ②

기본권 A는 평등권, B는 청구권이다. 갑.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병.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열거적·수단적인 권리이다. 평등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바로잡기 을.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정. 평등권과 청구권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03 형법과 형사 절차의 이해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56쪽

01 ○ 02 × 03 ○ 04 ○ 05 ㄹ 06 ㄱ
07 ㄴ 08 ㄷ 09 판사 10 피고인 11 검사
12 구속 적부 심사 제도 13 형사 보상 제도 14 배상 명령 제도

02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56~60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② 12 ⑤
13 ② 14 ③ 15 ③ 16 ⑤

서답형 문제

17 (1) (가)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나)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2) 모범 답안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금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금지하지 않으므로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두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18** (1) 형사 보상 제도 (2) 모범 답안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로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01 형법의 의미와 기능 답 ⑤

제시된 법률 조항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절도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법임을 알 수 있다. ㄷ.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ㄹ. 형법은 금지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미리 규정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해 준다.

바로잡기 ㄱ, ㄴ. 민법에 대한 설명이다.

02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답 ⑤

(가)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나)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존재와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⑤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달리 법률의 내용도 적정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03 소급효 금지의 원칙 답 ③

제시된 헌법 조항과 형법 조항은 모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바로잡기 ①은 성문 법률주의이다. ②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④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⑤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04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답 ②

㉠ 헌법재판소는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대법원은 ○○ 조항에는 양을 함부로 도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염소 도축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05 범죄의 성립 요건 답 ④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해당된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책임 조각 사유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이 있다.

④ ㉣은 '긴급 피난'이다.

06 범죄의 성립 요건 답 ③

A는 범죄 행위, B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 C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D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다.

ㄷ. 야구 경기 중 자신의 타구에 다른 사람이 맞아 다쳤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을 몰래 주워 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 분석

ㄱ. A – 갑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의 기밀 문서를 넘겨 주었다.
→ B에 해당한다.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ㄴ. B – 을은 심신 미약자로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친구들이 보석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봐 주었다.
→ A에 해당한다.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

07 범죄의 성립 요건 답 ⑤

군 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상관 면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마주한 상태인 '면전'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는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관 면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08 범죄의 성립 요건 답 ④

(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구 행위이다. 자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 '예'이고, ㉡~㉣은 '아니요'이다.

보충+심화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구 행위	법률상 절차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09 형벌과 보안 처분 답 ②

①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보안 처분은 예방적 성격의 제재로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③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은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④ 구류와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⑤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은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② 벌금은 재산형으로 5만 원 이상 부과하는 형벌이다. 범죄 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고에 귀속하는 형벌은 몰수이다.

보충+심화 형벌과 보안 처분의 종류

형벌	생명형	사형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자유형	징역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며 노역을 부과함.
		금고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
		구류	1개월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
	명예형	자격 상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함.
		자격 정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됨.
	재산형	벌금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몰수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
보안 처분	보호 관찰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
	치료 감호		심신 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수강 명령		지정된 교육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강의, 학습, 상담 등을 받도록 함.
	사회봉사 명령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10 형벌과 보안 처분 답 ②

ㄱ.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하며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ㄷ.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보안 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을 전제로 예방적 관점에서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이다.

바로잡기 ㄴ.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보안 처분은 미래의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에서 과거의 범죄 행위에 부과하는 제재인 형벌과 구별된다. ㄹ. 보안 처분은 형벌만으로 형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제도로서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11 형사 절차 답 ②

A는 기소, B는 선고이다. ②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선택지 분석

① A는 경찰이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기소는 검사가 한다.

③ ㉠은 범죄자의 자수나 현행범 체포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 수사는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개시된다.

④ ㉡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에 판사가 피의자의 수사 기록 검토와 직접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한다.

⑤ ㉢은 판사의 지휘 아래 집행된다.
→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보충+심화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한 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2 형사 절차 답 ⑤

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ㄷ.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석방되고,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은 제시한 조건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석 제도는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ㄹ. ㉠~㉢은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바로잡기 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13 형사 절차 답 ②

ㄱ.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한다. ㄹ.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바로잡기 ㄴ.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된다. ㄷ.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후 기소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1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답 ③

(가)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고, (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다. 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② 법관이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계속 받는 것이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④ 두 제도 모두 검사의 기소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통해 법관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지, 공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1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답 ③

을. 보석 제도는 법원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이다. 병.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바로잡기 갑.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며, 피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16 형사 피해자의 인권 보장 제도 답 ⑤

(가)의 갑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나)의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생활을 위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상 명령 제도는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7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2) [주요 키워드] 범죄 행위자, 유리, 작용

채점 기준	배점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공통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라고만 쓴 경우	하

18 형사 보상 제도

(2) [주요 키워드] 피고인, 구금, 무죄 판결, 피의자,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형의 집행, 재심

채점 기준	배점
형사 보상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형사 보상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61쪽

01 ⑤ 02 ⑤ 03 ③

01 명확성의 원칙 답 ⑤

제시문의 'A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로잡기 ㄱ. 성문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ㄴ.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02 형벌과 보안 처분 답 ⑤

ㄷ. 금고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인 자유형에 해당하며, 교정 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ㄹ. 보호 관찰은 범죄자가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을 때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선택지 분석

ㄱ.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집행 유예에 대한 설명이다. 선고 유예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ㄴ.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03 형사 절차 답 ③

③ 병(13세)은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한다.

선택지 분석

① 갑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갑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을을 기소하면 B는 을에 대한 형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인 을이다.
④ 정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노역에 복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 정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정은 노역에 복무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제도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
⑤ 검사가 ㉡을 정당방위로, ㉣을 긴급 피난으로 판단하였다면, 검사는 ㉠을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 ㉢을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았을 것이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04 법원과 헌법재판소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64쪽

01 ○ 02 ○ 03 × 04 ㄹ 05 ㄷ 06 ㄴ
07 ㄱ 08 대통령 09 대법원 10 단심제 11 대법원
12 지방 법원 합의부 13 헌법재판소 14 위헌 법률 심판
15 헌법 소원 심판

0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한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64~68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③ 16 ⑤

서답형 문제

17 모범 답안 심급 제도,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사법권의 독립 보장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 18 (1) (가) – 위헌 법률 심판, (나) – 탄핵 심판, (다) – 정당 해산 심판, (라) – 권한 쟁의 심판, (마) – 헌법 소원 심판 (2) 모범 답안 (마)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01 사법권의 독립 답 ⑤

제시된 헌법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의 실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의 독립,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전제로 한다. 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것이다.

보충 + 심화 **사법권의 독립 실현 방안**

법원의 독립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법관의 독립	•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며,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법관은 상급 법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음,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제도와 법관의 회피 제도를 인정함.

02 공정한 재판의 실현 방안 답 ②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는 심급 제도,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등이 있다. ①은 증거 재판주의이다. ③은 공개 재판주의이다. ④, ⑤는 심급 제도로, 중대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니라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결의 가능성을 줄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기본권 구제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03 심급 제도 답 ⑤

(가)는 대법원, (나)는 고등 법원이다. ① 심급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지만 모든 재판이 3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이고,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③ 심급 제도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고등 법원은 지역구 시·도 의원, 자치구·시·군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소송의 1심을 맡는다.
⑤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다.

04 심급 제도 답 ⑤

ㄷ. 심급 제도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행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동급 법원이므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선택지 분석

ㄱ.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1심 재판에서 김◇◇가 패소했고, □□공단이 승소했음을 알 수 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은 항소이다.

ㄴ. ㉠은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 판결문의 주문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아 ㉠은 2심 법원이다. 2심 재판에서는 김◇◇가 승소했고, □□공단이 패소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05 법원의 조직과 권한 답 ④

(가)는 대법원, (나)는 고등 법원이다. ㄱ. 가정 법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소송, 소년 보호 사건 등을 담당한다. ㄷ. 고등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ㄹ. 각급 법원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가진다.
바로잡기 ㄴ. 선거 소송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 대표 시·도 의원, 시·도지사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를 적용한다.

06 심급 제도와 법원의 조직·권한 답 ③

A는 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B는 대법원이다. ③ 대법원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선택지 분석

① △△당이 제기한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 대통령 선거 소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단심제가 적용된다.

②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A는 특허 법원이다.
→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A는 고등 법원이다.

④ B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한다.
→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⑤ 갑이 A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B에 항고할 수 있다.
→ A는 2심 법원으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07 심급 제도와 법원의 조직

답 ③

제시된 그림은 심급 제도를 나타낸다. ㄴ. (가)는 2심 법원이다.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라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3심 법원은 대법원이다. ㄷ. 법관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ㄱ.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 심급 제도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ㄹ. 동일 사건에 대해 (가)가 항소심이라면 (나)는 재항고심이다.
→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가)가 항소심이면 (나)는 상고심 재판이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이다.

08 심급 제도와 법원의 조직

답 ⑤

① 3심 제도의 목적은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해당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원이 가진다. ③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시·군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 소송은 2심제이다. 고등법원이 1심을, 대법원이 2심을 관할한다. ④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9 헌법재판소

답 ④

법률의 위헌이나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ㄱ.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한다. ㄴ.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ㄹ.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바로잡기 ㄷ.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 재판 기관이다. 사법 조직에서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10 헌법재판소의 권한

답 ④

제시된 자료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탄핵 심판, ㉣은 정당 해산 심판, ㉤은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해산을 요구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선택지 분석

① ㉠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은 법원 또는 국회의 소추가 있어야 진행된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소추가 있어야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⑤ ㉤은 ㉡을 제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필수 요건과 관계 없다.

11 헌법재판소의 권한

답 ①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탄핵 심판, (다)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라)는 정당 해산 심판이다. ②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③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권자는 국민이다. ④ (다)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된다. 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① 법률의 위헌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2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답 ②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ㄱ.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ㄹ.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바로잡기 ㄴ. 을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13 헌법 소원 심판

답 ①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②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③ 헌법 소원 심판은 심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청구한다.

14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답 ⑤

A는 헌법재판소이다. ㄷ.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바로잡기 ㄱ.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법원이다. 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졌다.

15 사법 작용의 한계 답 ③

제시된 사례에서는 온라인 암표 거래와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서 사법부에 의한 권리 다툼 판단이 불가능함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관련 법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법 작용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16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답 ⑤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 주민 발안 제도,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 입법 제안 및 법령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국민 신문고 활용, 자신이 속한 지방 자치 단체나 지방 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례와 관련된 개선 의견 제안 등이 있다.

바로잡기 갑.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인 의원 소개 청원 외에도 전자 청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 동의 청원을 할 수 있다. 을. 주민 발안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 의회에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17 공정한 재판의 실현 방안

(2) [주요 키워드] 심급 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공개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입각(증거 재판주의), 사법권의 독립(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채점 기준	배점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8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

(2) [주요 키워드] 기본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채점 기준	배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를 〈조건〉의 단어 중 기본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를 〈조건〉의 단어 중 기본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사용했으나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를 썼으나 〈조건〉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69쪽

01 ⑤ 02 ④ 03 ③

01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답 ⑤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의 결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로잡기 ① 재판부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독립과 관련 있는 제도이다. ②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③,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최종적인 판단이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헌법 소원 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보충+심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법률의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 헌법 불합치 결정(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함).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02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답 ④

A는 항소심 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ㄱ.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ㄹ. 항소심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소원 심판 결과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두 기관 모두 형법 ○○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였음을 보여 준다.

바로잡기 ㄷ. 헌법 소원 심판의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내려졌고, 갑에 대한 항소심은 계속 중이므로 1심 법원의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03 심급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답 ③

A는 2심 법원, B는 헌법재판소,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바로잡기 ㄱ.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ㄴ. 대통령 선거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70~77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②	10 ②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③	17 ②	18 ①
19 ⑤	20 ②	21 ④	22 ②	23 ⑤	24 ⑤
25 ⑤	26 ④	27 ②	28 ②		

서답형 문제

29 (1) 모범 답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긴장 관계를 보인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든 법 제도를 법치주의가 견제하기도 한다. 반대로 경직된 법치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의견을 모아 법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2) 모범 답안 위 그림에서 나타난 제도는 위헌 법률 심판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에는 탄핵 심판, 국민 참여 재판이 있다. **30** 모범 답안 ㉠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 **31** (1) 모범 답안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툴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이를 다시 재판하는 제도이다. (2)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32** 모범 답안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그 당사자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01 민주주의의 한계 답 ⑤

제시된 그림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라도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02 사회 계약설 답 ④

(가)는 사회 계약론자인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①, ②는 홉스의 주장이다. ③은 로크의 주장이다. ⑤ 사회 계약론자는 사회 계약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는 가상의 형태로 표현했다.

④는 루소의 주장으로, 루소는 자연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충 + 심화 **사회 계약설**

홉스	•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 •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통치자에게 전부 양도해야 함. • 군주의 절대적 지배를 옹호함.
로크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이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 • 자연권을 통치자에게 일부 위임함. •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며, 저항권을 인정함.
루소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 • 자연권은 양도 불가하고, 일반 의지에 의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함. • 민주 공화정을 옹호함.

03 직접 민주주의 요소 답 ②

(가)는 국민 발안, (나)는 국민 투표, (다)는 국민 소환에 대한 설명이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대의제에서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04 권력 분립 답 ③

첫 번째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제시문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으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권력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독재 정권이 나타나거나 부패하기 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용해지게 된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5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 답 ③

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제도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분한다.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ㄷ.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다.

바로잡기 ㄱ.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 의회가 행사한다. ㄹ.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하여 사법부를 견제한다.

06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 답 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법관 탄핵 소추 의결권이 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바로잡기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

07 헌법의 기능 답 ⑤

헌법은 국가 창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조직 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은 헌법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 + 심화 **헌법의 기능**

국가 창설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 범위 등을 규정함.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
조직 수권 규범	국가기관을 조직하고(조직 규범), 각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	권력 분립과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함.
사회 통합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함.

08 복지 국가의 원리 답 ②

제시된 자료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③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④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⑤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09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답 ②

헌법 제10조는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밝히고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잡기 ① 기본권의 역사적 배경과는 관계 없다. ③ 국민의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기본권이 천부적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 준다. ⑤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10 기본권 유형 답 ②

(가)는 사회권, (나)는 참정권, (다)는 청구권이다. ㄱ.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ㄷ.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적극적·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바로잡기 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ㄹ. 사회권,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권리만 보장되는 개별적 권리이다.

11 평등권 답 ④

㉠은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바로잡기 ①, ③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② 참정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자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1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답 ②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바로잡기 을.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정.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13 명확성의 원칙 답 ③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로잡기 ①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이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답 ②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항의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

바로잡기 ㄴ. 민사·행정 소송에서는 유추 해석이 적용되기도 한다. ㄷ.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5 위법성 조각 사유 답 ④

㉠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ㄱ. 의사가 환자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며 신체에 상처를 내는 의료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현행 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형사 소송법〉에 따라 일반인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음주 운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로잡기 ㄹ. 만약 정이 출국 직전 채무자를 붙잡는 등 자신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구 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법률상 절차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16 위법성 조각 사유 답 ③

㉡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로잡기 ①, ② ㉠은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④, ⑤ ㉢은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17 보안 처분 답 ②

(가)에는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을 전제로 예방적 관점에서 부과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의 사례가 들어갈 수 있다. 보안 처분에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다.

바로잡기 ①은 자유형에 해당한다. ③은 재산형에 해당한다. ④는 명예형에 해당한다. 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보충 + 심화 **보안 처분**

보호 관찰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도움.
치료 감호	심신 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수강 명령	지정된 교육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강의나 학습을 받도록 명함.
사회봉사 명령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18 형사 절차 답 ①

㉠은 피의자, ㉡은 피고인이다. 피의자는 검사가 구속 영장 청구 시 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②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판사와 ㉡이다.
→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③ ㉡은 재판 중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재판 중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은 용의자, ㉡은 피의자이다.
→ ㉠은 피의자, ㉡은 피고인이다.

⑤ ㉠과 달리 ㉡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19 형사 절차 답 ⑤

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추정한다. ㄷ. 보석 제도는 법원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이다. ㅁ. 불기소 처분 중 기소 유예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ㄱ.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ㄹ.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20 명예 회복 제도 답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무죄가 확정된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④ 배상 명령 제도는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⑤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중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피해자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21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제도 답 ④

④ 집행 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선택지 분석

① ㉠은 원칙적으로 판사만 할 수 있다.
→ 2026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판사는 기소권이 없다.

② ㉡은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보석 제도는 재판 중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③ 갑과 달리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을 청구할 수 없다.
→ 피고인과 검사 둘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⑤ ㉤으로 인해 갑은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피고인 갑이 유죄라는 뜻이므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와 달리 명예 회복 제도나 형사 보상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22 법원의 조직 답 ②

㉠은 대법원, ㉡은 특허 법원, ㉢은 회생 법원이다. ㄱ.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회생 법원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 조정 절차를 담당하며 회생 사건 및 파산 사건의 재판권을 가진다.

바로잡기 ㄴ. 특허 법원은 특허 소송의 1심을 관할하고 대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3심제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다.

23 공정한 재판의 실현 방안 답 ⑤

㉠은 항소, ㉡은 항고, ㉢은 제척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잡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이다. 법관에 대한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평하게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법관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24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답 ⑤

헌법재판소는 공범이 없는 경우나 공범이 있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종교 행사에 각각 참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보다 침해가 작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종교 행사 참석을 전면 금지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피해의 최소성)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선택지 분석

① 법원과 구치소가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다.
→ 갑의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은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라는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②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갑은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위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은 재항고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수단은 적합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5 헌법 소원 심판

답 ⑤

(가)는 개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개인이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26 과잉 금지의 원칙

답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과잉 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다. ①은 피해의 최소성, ②는 수단의 적합성, ③은 법익의 균형성, ⑤는 목적의 정당성이다.
④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이다.

27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답 ②

채점 결과가 2점인데, 총 3점이므로 (가)에는 정답이 들어가야 한다. 답안지에서 (1)의 내용은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권력 통제 기능도 담당하므로 (2)의 내용은 오답이다. ② 탄핵 심판 시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선택지 분석

① 헌법재판소의 장는 헌법 재판관 9인의 전원 합의를 통해 선출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 위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④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권한 쟁의 심판은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검사의 신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 위헌 법률 심판은 검사가 아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8 사법적 해결의 한계

답 ②

제시된 사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29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 〔주요 키워드〕 민주주의, 법치주의, 긴장 관계, 견제, 경직된 법치주의, 개선

채점 기준	배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긴장 관계를 보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만든 법 제도를 법치주의가 견제하거나 경직된 법치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법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긴장 관계를 보인다고 서술했으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견제 관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긴장 관계를 보인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국민 참여 재판

채점 기준	배점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국민 참여 재판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상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국민 참여 재판 중 두 개만 쓴 경우	중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국민 참여 재판 중 한 개만 쓴 경우	하

30 과잉 금지의 원칙

〔주요 키워드〕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채점 기준	배점
㉠에 들어갈 원칙과 그 내용 네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상
㉠에 들어갈 원칙과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쓴 경우	중
㉠에 들어갈 원칙과 그 내용을 한 가지만 쓴 경우	하

31 인권 보장 제도

(1) 〔주요 키워드〕 확정된 판결, 중대한 오류, 다시 재판

채점 기준	배점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이를 다시 재판하는 제도라고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다시 재판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32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

〔주요 키워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기본권 침해 여부 결정,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 기각, 당사자의 청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

채점 기준	배점
㉠, ㉡의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과 의미를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 ㉡의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과 의미를 〈조건〉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한 가지 유형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 ㉡의 유형의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과 의미를 〈조건〉을 일부분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III 사회생활과 법

01 근로자와 법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82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법정 최저 임금 09 50 10 30
11 취직 인허증 12 임금 체불 13 부당 해고
14 부당 노동 행위 15 산업 재해

04 청소년 근로자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82~86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④ 11 ① 12 ①
13 ④ 14 ③ 15 ② 16 ② 17 ①

서답형 문제

18 (1) ㉠ – 노동력, ㉡ – 임금 (2) 모범 답안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 **19** (1) 근로자, 노동조합 (2) 모범 답안 갑의 사례는 부당 노동 행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의 사례는 부당 해고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01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답 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에게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률에 따른 최저 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제시된 헌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저 수준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02 노동법 답 ⑤

ㄱ, ㄷ. 노동법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띤다. ㄴ. 노동법에는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03 〈근로 기준법〉 답 ②

'이 법'은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사항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바로잡기 ① 〈근로 기준법〉은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사회법이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최저 임금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04 근로 계약서 답 ③

ㄴ. 갑과 을이 계약한 시급은 2026년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다.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ㄷ. 〈근로 기준법〉상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 근로 시에는 법정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지 분석

ㄱ. 갑은 을에게 백화점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ㄹ. 을은 하루에 6시간 근무하므로 갑은 을에게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을은 6시간을 근무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이 법정 의무이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강제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05 근로 계약 답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A는 4개월간 계속 근무하여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만, B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06 노동 삼권 답 ⑤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 교섭권으로, 노동 삼권에 해당한다. 노동 삼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되어 있다.

바로잡기 ③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이다. ④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 조건의 기준을 다루는 법이다.

07 노동조합 답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바로잡기 ①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법정 최저 임금은 국가 기구인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적인 단체이다.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08 쟁의 행위 답 ④

㉠에 들어갈 용어는 쟁의 행위이다. ④ 쟁의 행위는 헌법상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서,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면 정당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업무 방해 등의 형사 처분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09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계약 답 ②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미성년자라도 근로 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③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⑤ 연소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이 100% 적용된다.

보충+심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근로 계약	•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함. •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함.
근로 조건	• 근로 시간 도중 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함. • 휴일, 휴가 등 관련 규정이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임금	•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 보호자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함.

10 성인과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계약 답 ④

(나)에 '사업장에 근로자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가?'가 들어가면 갑은 17세이다. 사용자는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선택지 분석

① (가)에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갑과 을 모두 '예'라고 답해야 한다. 갑이 '아니요'라고 답했으므로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② (가)에 '야간 근로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가 들어가면, 갑은 17세이다.
→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예'라고 답한 을이 17세이다. 연소자는 야간 근로를 위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나)에 '연장 근로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을은 20세이다.
→ (나)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예'라고 답한 갑이 20세이다. 연소자는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 불가하므로 갑이 20세, 을이 17세이다.

⑤ 갑이 17세라면 (나)에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갑이 17세라면, (나)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연소자는 연장 근로를 포함해도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11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답 ①

ㄱ. 유흥 주점과 같은 업종은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취업이 예외 없이 금지된다. ㄴ. 〈근로 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바로잡기 ㄷ.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ㄹ.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 최대 40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12 임금 체불 답 ①

ㄱ. 임금 체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ㄷ, ㄹ.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임금 체불 답 ④

제시된 사례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근로자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나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근로 감독관의 조사로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사정을 지시한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형사 절차를 거친다.

14 부당 노동 행위 답 ③

ㄱ, ㄹ.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행위와 특정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보충+심화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 노동조합 가입·조직, 정당한 조합 활동·단체 행동, 행정 관청·노동 위원회에 신고·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탈퇴·가입하지 않을 것 등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 협약 체결·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15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답 ②

갑의 사례는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이고, 을의 사례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 행위이다.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독립된 제도이므로, 병행이 가능하다.

선택지 분석

① 갑은 부당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을이 당한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단독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병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 을 모두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충 + 심화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행정적 구제	• 절차: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청구 →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 제기 • 신청 주체: 부당 해고는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음.
사법 및 형사적 구제	• 부당 해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함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병행 가능). • 부당 노동 행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 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함.

16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답 ②

갑.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시,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을. 부당 해고와 달리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때는 조사와 심문이라는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17 산업 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답 ①

ㄱ.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ㄷ. (가)는 산업 재해,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피해 구제를 위해 (가)에서는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18 근로 계약

(2) [주요 키워드] 〈근로 기준법〉, 해당 부분 무효, 최저 기준 적용

채점 기준	배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요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조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거나 주요 키워드 중 일부만 사용하여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고 서술한 경우	하

19 부당 노동 행위

(2) [주요 키워드] 부당 노동 행위, 노동 삼권 침해(방해), 부당 해고, 해고의 요건과 절차 미비(미준수)

채점 기준	배점
갑과 을의 사례에 해당하는 용어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갑과 을의 사례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갑의 사례는 부당 노동 행위, 을의 사례는 부당 해고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87쪽

01 ④ 02 ⑤ 03 ⑤

01 근로 계약

답 ④

①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인 자이다. 병(18세)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최저 임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을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15세 미만인 자(을)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다. ⑤ 근로 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서(서면) 형태의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의무가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을(14세)은 비치 의무 대상이나, 병(18세)은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02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답 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번째 사례에서 재심 인용 판정을 받은 사용자와, 두번째 사례에서 재심 기각 판정을 받은 사용자 모두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바로잡기 ① 갑은 부당 해고가 아닌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노동 위원회의 구제 신청과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지방 노동 위원회(인용)와 중앙 노동 위원회(재심 신청 기각) 모두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판정 결과는 서로 같다.

03 근로 계약과 부당 해고

답 ⑤

ㄷ. 제시된 사례의 을은 17세인 청소년 근로자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에도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의 2시간 연장 근로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ㄹ.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가 성립한다.

선택지 분석

ㄱ. 갑은 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인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을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방 노동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노동 관서나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02 경제생활의 문제와 법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90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소비자 기본법〉 08 7일 09 담합 10 소 11 공
12 소 13 공

03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90~94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①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④

서답형 문제

19 (1) ㉠ – 사회 보장 제도, ㉡ – 공공 부조 (2) 모범 답안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기초 연금법〉, 〈의료 급여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 보험과 달리 빈곤 등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 (1) 선택할 권리 (2) 모범 답안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01 사회 보장 제도의 역사적 발전 답 ②

(가)는 1935년 미국에서 제정되어 '사회 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한 사회 보장법, (나)는 1942년 영국의 보편적 복지 국가 기틀을 마련한 베버리지 보고서, (다)는 1919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사회권을 명시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02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답 ⑤

ㄷ.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ㄹ.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 보장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바로잡기 ㄱ. 우리나라는 건강 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 보험에 대해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ㄴ.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03 사회 보장 제도 답 ④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으로, 갑은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인 돌봄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며,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부조로, 을은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근거로, 갑과 을 모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을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 부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충+심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의무 가입이 원칙이고,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님.
공공 부조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님.
사회 서비스	•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 수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함.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함.

04 사회 보험 답 ①

㉠은 건강 보험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이다. ㄱ.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국민 건강 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과 국가(국민 건강 보험 공단)가 진료비를 나누어 부담한다.

바로잡기 ㄷ. 건강 보험 비용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지만, 수혜 정도와는 무관하다. ㄹ.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5 사회 보험 답 ⑤

〈국민 연금법〉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사회 보험은 지불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자신이 낸 금액만큼만 정확히 비례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잡기 ①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③ 사회 보험의 비용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06 공공 부조 답 ④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을, 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부조 사례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의료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다.

바로잡기 갑. 사회 서비스의 사례이다. 병. 사회 보험의 사례이다.

07 공공 부조 답 ④

㉠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 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 연금법〉, ㉡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모두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08 사회 서비스

답 ⑤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수혜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므로 비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09 헌법 제34조

답 ③

ㄴ.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사회 보장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사회 보장 기본법〉의 기초가 된다. ㄷ.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다.

바로잡기 ㄱ. 이 조항은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다. ㄹ. 사회 보장 제도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재원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0 소비자의 권리

답 ①

소비자의 '알권리'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갑이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알권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충 ✪ 심화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11 리콜 제도

답 ②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기업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거두어들여 보상해 주는 '리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답 ①

ㄱ.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시하여 법적으로 보장한다. ㄴ. 소비자 보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사업자는 안전한 물품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진다.

바로잡기 ㄷ.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ㄹ. 〈소비자 기본법〉 제5조는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실천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13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답 ②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갑과 여행사 양측의 합의 결과에만 따라야 한다.
→ 개인 간의 계약이라도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갑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갑은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이며,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지위 남용이 아니다.

④ 갑의 일방적인 해약 통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법적 분쟁은 관련 법규와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⑤ 갑은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과 여행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충 ✪ 심화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 소비자가 사업자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내용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철회가 가능함.
-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4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답 ④

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 소비자 만족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타사에 피해를 준 행위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된다.

바로잡기 ㄴ. 제시된 사례는 개별 기업의 경영 방침을 넘어선 불공정 거래 행위이므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다.

15 공정거래위원회

답 ⑤

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를 금지하면서 특정 기업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한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잡기 ㄱ,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충 ✪ 심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각종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함.
-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나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시정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나 상호 출자를 억제하여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함.

16 소비자 보호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답 ⑤

①, ②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한다. ③ 허위 광고는 불공정 거래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

라도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구제 수단을 찾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행사이다. 이를 책무 위반으로 보아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소비자의 피해 구제 답 ④

㉠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국가 기관은 한국 소비자원이다. ㉡ 가맹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국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18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답 ④

ㄱ.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므로 갑은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ㄴ. 가맹 본부가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계약 해지를 위협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ㄹ. 독과점, 담합,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바로잡기 ㄷ. 갑의 사례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권과 관련된 분쟁이며,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9 사회 보장 제도

(2) [주요 키워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기초 연금법〉, 〈의료 급여법〉, 미래의 위험 대비, 현재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구제

채점 기준	배점
(가)에 들어갈 법률의 명칭과 사회 보험과의 비교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에 들어갈 법률을 정확하게 썼으나 사회 보험과의 비교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에 들어갈 법률의 명칭만 서술한 경우	하

20 소비자의 권리

(2) [주요 키워드] 〈전자 상거래법〉, 소비자의 단순 변심,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만 서술한 경우	중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95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1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한 법률 답 ④

첫 번째 법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두 번째 법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다. ㄴ, ㄹ.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등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사법적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법적 원리를 도입한 법률들이다. ㄷ. 두 법률의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없다.

02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방법 답 ⑤

①, ④ 〈전자 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품의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7일) 내에는 계약 취소를 허용한다. 특히 법률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철회권은 보장된다. ②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약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③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인 소비자 분쟁 조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쟁 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3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답 ①

(가)는 지방 자치 단체의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유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②, ④ (나)는 알권리를 침해받은 사례이다. ③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행사라기보다,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소비자의 책임에 가깝다. ⑤ (가)와 (나)는 각각 안전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안일 뿐, 담합으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가 아니다.

04 소비자 피해 구제 답 ⑤

갑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일환이다.

선택지 분석

① 갑은 A 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A 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A 사의 신형 자동차 결함에 대한 과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 갑이 〈제조물 책임법〉 적용 시 소비자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할 책임은 없다.

③ A 사는 리콜을 실시하였다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향후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개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④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절차는 법원의 판결과 별개이므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3 현대적 법률관계와 지식 재산권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98쪽

01 × 02 ○ 03 × 04 ○ 05 ×
06 일정하지 않은 07 근로자 08 가능 09 ㉡ 10 ㉠
11 ㉠ 12 표 13 저 14 표

0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설비를 제공·운영하는 자이다.

03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발한 상호 작용으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05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를 찾기 어렵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98~102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③ 08 ① 0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③

서답형 문제

17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2) 모범 답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의 거래 중개자로서 공간 관리 소홀이나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를 찾기 어렵거나 해당 행위자의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18 (1) 저작권 (2) 모범 답안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타인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한 잘못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갑의 행위는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윤리적 문제인 반면, 을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0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답 ④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공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 문제 발생 시, 이들이 공간을 충분히 관리했는지 혹은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 등의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택지 분석

①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찾기에 용이합니다.
→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②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가짜 뉴스, 명예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③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인터넷 공간을 관리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존 법률관계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는 거래 중개자의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법률관계와 차이점이 있다.

보충 ✪ 심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의 특징

-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은 가상 공간을 토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중개자의 역할을 함.
- 가짜 뉴스, 악성 댓글, 명예 훼손 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대될 위험이 큼.
-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를 찾기가 어렵고, 행위 당사자를 찾는다고 해도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0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답 ⑤

인터넷은 익명성이 강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가해자에게 충분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상 공간의 관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손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 부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법적 책임 부과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③ 인터넷 이용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④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0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답 ②

㉠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은 플랫폼이라는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거래의 당사자(이용자)일 뿐, 공간 자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운영 주체로 보기 어렵다.

04 인터넷 공간 답 ④

제시된 사례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왜곡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범위와 규모가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훨씬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바로잡기 ①, ② 제시된 사례와 관련한 설명이 아니다. ③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이므로 온라인 매체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인터넷상 불법행위 답 ①

ㄱ.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정보로, 대개 조직적인 유포 과정을 거친다. ㄴ. 악성 댓글은 표현의 수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 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 훼손은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명예 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ㄷ. ㉢은 인터넷상에서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 훼손은 해당 정보가 사실이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ㄹ. ㉡, ㉢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인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진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간의 관리자로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 등을 지는 것이다. 인터넷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0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답 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공간의 중개자로서 인터넷 공간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책임 인정 여부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핵심이 된다.

바로잡기 ① 제시된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④ 제시된 사례는 정부의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07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답 ③

을과 병은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불 미이행'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①, ⑤ 갑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④ 제시된 사례는 온라인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게시글에 달린 모욕적인 악성 댓글들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커뮤니티를 익명으로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피해자인 갑이 직접 관리자를 기소할 수는 없다.

08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답 ①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 시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강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잡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공간 관리자로서의 방조 책임을 지는 것이지, 불법행위 당사자와 동일한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09 플랫폼 노동 답 ⑤

㉠은 플랫폼 노동이다. ㄱ. 근무 장소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ㄷ. 주로 특정 과업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을 수행한다. ㄹ.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긱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도 하다.

바로잡기 ㄴ. 플랫폼 노동은 주로 과업 완료 시 계약이 종료되는 단기적·임시적 고용 형태를 띠며,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충 + 심화 플랫폼 노동

특징	• 플랫폼의 중개를 기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래함. • 형식상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함. • 근무 장소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특정 과업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임시적·단기적 업무가 많음.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을 제공함.
법적 쟁점	•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 임금, 휴가 등에 있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10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답 ④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미인정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 보험 가입 확대, 고용 보험 적용 등이 있다.

11 지식 재산권의 유형 답 ②

ㄱ. 특허권, 상표권 등은 산업 활동으로 창출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산업 재산권에 해당한다. ㄷ.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한다.

바로잡기 ㄴ. 〈지식 재산 기본법〉상 지식 재산에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창출된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도 포함된다. ㄹ. 반도체 배치 설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신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을 통해 엄격히 보호된다.

보충 + 심화 지식 재산권의 유형

산업 재산권	• 산업 활동으로 창출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지식재산처에 출원 후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됨.
저작권	• 문화 예술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일정 기간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고, 이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함.
신지식 재산권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

12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 답 ②

우리나라는 지식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 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바로잡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나 독점 및 과점 등을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③ 지식 재산권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특허 담당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호하고 있다. ④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 등에서 진행한다. 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거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3 지식 재산권의 유형

답 ③

(가)는 산업 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해당한다. (나)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영업 비밀,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캐릭터 산업 등이 해당한다. (다)는 저작권으로,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이 해당한다.

14 저작권

답 ④

갑은 불법 공유, 을은 불법 복제와 불법 공유 행위에 해당한다. ㄴ. 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고 이를 다시 게시하여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ㄹ. 갑과 을은 모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바로잡기 ㄱ.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공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ㄷ.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15 산업 재산권

답 ①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뿐만 아니라 색채와 결합한 형태 등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권리이다. 제시된 사례처럼 매장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특정 브랜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를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주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

16 사회 변화에 따른 지식 재산권의 보호

답 ③

인공지능 및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 재산권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7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2) [주요 키워드] 거래 중개자, 방조, 행위자, 손해배상 능력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의 특징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보기〉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의 특징 두 가지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보기〉의 용어를 일부만 사용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8 저작권

(2) [주요 키워드] 저작물,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갑과 을의 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보기〉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보기〉의 용어를 일부만 사용하여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거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03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답 ⑤

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므로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③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는 정보의 생산자로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④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설비를 제공·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공간 관리 의무나 방조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02 플랫폼 노동과 지식 재산권

답 ③

㉠은 플랫폼 노동, ㉡은 지식 재산권이다. 지식 재산권 중 저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등의 저작 인접권도 함께 보호한다.

바로잡기 ①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②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 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지식 재산권은 절대적·배타적 권리이다. ⑤ 지식 재산권은 긴 경제 등장 이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다.

03 저작권

답 ⑤

을이 침해하는 권리는 저작권이다. ㄱ. 저작권은 외부로 드러난 표현을 보호할 뿐, 그 바탕이 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ㄴ.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으로서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ㄹ. 영화를 웹툰으로 변형하는 것은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적이다.

바로잡기 ㄷ. 작품의 예술적 가치나 수준은 저작권 성립 및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4 산업 재산권

답 ②

제시된 자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산업 재산권 중 특허권에 해당한다. ㄱ, ㄷ. 산업 재산권은 일정 기간 권리자에게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해당 권리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한다.
→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 재산권은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친 뒤, 국가 기관에 등록해야만 권리가 인정된다.

ㄹ.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객체로 한다.
→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다. 반면,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객체로 하며, 산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104~107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②
13 ② 14 ③

서답형 문제

15 (1) 모범 답안 단체 행동권으로, 단체 교섭을 통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모범 답안 쟁의 행위의 목적, 방법 및 절차가 법령과 사회적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쟁의 행위는 민주적인 절차로 쟁의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쟁의 행위 시 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필수적인 공익사업 등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6 (1) 한국 소비자원 (2) 모범 답안 갑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01 우리나라 노동법 답 ②

(가)는 〈근로 기준법〉, (나)는 〈최저 임금법〉, (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에 해당한다.

02 근로 계약 답 ③

ㄴ.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계약은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므로, ㉡은 '아니요'이다. ㄹ.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므로, B가 17세라면 (다)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ㄱ. (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가?'가 들어가면 ㉠은 '예'이다.
→ 취직 인허증은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할 때 필요하므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한다.

ㄷ. A가 17세라면 (다)에는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법정 최저 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03 연소 근로자 답 ⑤

연소 근로자라고 해서 주말(토, 일) 근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휴일은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일로 정했으므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04 임금 체불과 쟁의 행위 답 ①

ㄱ. 임금 체불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ㄷ.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받도록 행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ㄴ. 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ㄹ. 〈근로 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05 부당 해고 답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②,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06 부당 해고 답 ①

ㄱ.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ㄹ. 부당 해고에 대한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ㄴ. 사법적 구제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다. ㄷ.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07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답 ④

을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갑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선택하였다.
→ 갑은 법원이 아닌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선택하였다.

②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갑의 부당 해고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당 해고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동일한 판정을 내렸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두 기관의 판정은 달랐다.

⑤ 을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08 산업 재해와 직장 내 성희롱 답 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갑은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바로잡기 ① 갑은 산업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근로 복지 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③ 을은 고용노동부 신고, 법원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외부 절차를 통해서

도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09 사회 보장 제도 답 ④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이다.

④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 보험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수혜자가 나눠서 비용을 부담한다.

10 소비자의 권리 답 ⑤

제시된 사례에서는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에 정책 및 시스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의견을 반영할 권리'에 해당한다.

1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답 ④

① 〈소비자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책무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② 원하지 않는 구성까지 구매하게 하는 묶음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③ 소비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⑤ 소비자는 〈전자 상거래법〉에 따라 단순 변심 시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④ 리콜 제도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이를 회수, 수리, 교환해 주는 제도이다. 리콜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답 ②

ㄱ,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 기관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ㄴ. ㉡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 담합은 공급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등을 제한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이다.

ㄷ. ㉢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법적 제재이다.
→ 과징금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제재이다.

13 현대적 법률관계 답 ②

ㄱ. 플랫폼 A는 온라인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소비자와 식당,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거래 중개자에 해당한다. ㄹ.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따른 요양 급여 청구는 A의 동의와 무관하다.

바로잡기 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랫폼 A는 갑에게 유급 휴가, 법정 최저 임금 등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ㄷ. 갑은 플랫폼 A와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하였으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을 제공한다.

14 지식 재산권 답 ③

① 지식 재산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뉜다. ② 산업 재산권은 지식 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산업 활동으로 창출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산업 재산권은 지식재산처에 특허 출원 후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다. ④ 산업 재산권 및 저작 재산권은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⑤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의 한 종류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은 산업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그림 등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15 노동 삼권

(1) [주요 키워드]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 쟁의 행위

채점 기준	배점
단체 행동권을 쓰고, 단체 교섭 결렬 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단체 행동권을 쓰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단체 행동권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법령과 사회 질서 준수, 민주적 절차, 폭력 행위 금지, 공익사업 유지

채점 기준	배점
주요 키워드 중 세 가지를 포함하여 쟁의 행위의 합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요 키워드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쟁의 행위의 합법적 요건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주요 키워드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쟁의 행위의 합법적 요건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6 소비자 보호

(2) [주요 키워드] 청약 철회 가능, 〈전자 상거래법〉,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채점 기준	배점
청약 철회 가능 여부를 정확히 쓰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유와 법정 기한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쓰고, 이유 또는 법정 기한 중 일부만 제시하여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Ⅳ 학교생활과 법

01 학생·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12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 09 마찬가지로, 가진다
10 〈청소년 기본법〉 11 ㄹ 12 ㄱ 13 ㄴ

0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생을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12~116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④ 16 ②

서답형 문제

17 (1) 모범 답안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2) 모범 답안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할 의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18** 모범 답안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01 학생·청소년의 의미 답 ②

ㄱ.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ㄷ.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바로잡기 ㄴ.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ㄹ.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2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02 청소년의 권리 보호 답 ①

② 민법에서는 책임을 변별한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법적 근거이다. ④, ⑤ 학생, 청소년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이고, 민법에서 정의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로 구분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

03 학생·청소년의 권리 보장 답 ⑤

ㄷ.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ㄹ.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도 함께 제시한다.

바로잡기 ㄱ.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ㄴ. 청소년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만 한 명의 인간이자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제시한 기본적 인권을 모두 보장한다.

04 학생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한계 답 ④

제시된 법 조문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 과정에 따라 배우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학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시된 법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정은 재학생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05 학생·청소년의 권리 보장 답 ⑤

제시된 사례들은 학생·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해당한다.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되어 제한적인 권리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로잡기 ①, ③ 학생과 청소년은 한 명의 인간이자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② 학생과 청소년은 법적 책임의 면제가 있지만, 법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는 오프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06 학생·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답 ①

갑.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을.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청소년 우대, 건강 보장, 위기 청소년 지원을 다루고 있다.

바로잡기 병.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정.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07 청소년의 보호 답 ②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한 행위를 제한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잡기 ① 청소년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 ③ 청소년은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④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 중이고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가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08 학생·청소년의 의무 답 ③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선택지 분석

① 청소년은 군대에 갈 수 없으므로 ㉠에 국방의 의무가 들어갈 수 없다.
→ 청소년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② ㉡에는 학습자로서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 학습자로서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 ㉡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 ㉠의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는 학생과 청소년의 성장 및 보호를 위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⑤ ㉡과 달리 ㉢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 학습자로서의 의무와 청소년의 의무 둘다 이행하여야 하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09 학생·청소년의 의무 답 ③

ㄴ.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할 의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학생·청소년의 의무는 교육 공간에서 적용하는 규칙으로 구체화되는데, 각 학교는 〈교육 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을 근거로 학교 규칙을 제정한다.

바로잡기 ㄱ.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ㄹ. 청소년도 헌법에 명시된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의 성장 및 보호를 위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학생·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관계 답 ③

학생·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다. 학생·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청소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1 학생·청소년의 권리 존중 의무 답 ④

학생·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의무의 주체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민법 등 사법 관계에서는 개인이 의무를 이행할 때에 권리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등 공법 관계에서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의무의 주체이다. ② 학생·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로서, 학생·청소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⑤ 권리와 의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것이다.

12 〈교육 기본법〉 답 ③

학생과 청소년은 〈교육 기본법〉에 따라 학습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할 의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학업 성취율 혹은 점수나 성적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은 〈교육 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다.

13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답 ⑤

ㄴ, ㄷ.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ㄹ.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잡기 ㄱ.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은 〈교육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충+심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학생·청소년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 답 ④

학생·청소년이 법 규범에 제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 존립과 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이다. 둘째,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이다. 학생·청소년의 의무는 이들이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15 학생·청소년의 의무 답 ④

ㄱ. 학생과 청소년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 ㄴ. 〈교육 기본

법〉에서는 학생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ㄷ.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잡기 ㄹ. 청소년의 의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책임감 부여에 가깝다.

16 학생·청소년의 의무 답 ②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갑'이며, 그 이유는 학생·청소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과 보호를 위하여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잡기 ① 학생·청소년은 헌법상 의무가 있다. ③ 학생과 청소년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⑤ 〈교육 기본법〉과 〈청소년 기본법〉은 학생·청소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

(1) [주요 키워드] 9세 이상 24세 이하, 19세 미만

채점 기준	배점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 구분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 구분 기준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학습자, 윤리 의식, 학교 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채점 기준	배점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 〈청소년 기본법〉

[주요 키워드] 청소년 육성, 차별, 자기 의사, 자기 발전

채점 기준	배점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내용을 〈조건〉에 제시된 단어 중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조건〉에 제시된 단어 중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했으나,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조건〉에 제시된 단어 중 한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했으나,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17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1 청소년의 권리 답 ⑤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교통 수단 할인이 불가합니다.
→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교통 수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생이 아니므로 원동기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생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 교통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③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도로 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청소년증을 학교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기초 자치 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학교가 아닌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02 학생·청소년의 의무 답 ①

갑.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 을.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에는 학생이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할 의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의무 등이 있다.

바로잡기 병.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4 제2항의 내용으로,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 (가), (다) 둘다 모든 청소년이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03 학생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 답 ③

① 고등학생인 갑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갑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권장 및 보호되는 학생 자치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④ 갑이 학원을 그만두고 수강비를 환불받고 싶을 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학습자의 권리에 따르면 된다. ⑤ 수학여행 중 사고가 나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성인과 계약을 맺는 상황이 아니다.

04 청소년 보호 답 ②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한다.

바로잡기 ① 갑과 을 모두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다. ③ 갑과 을 모두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④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에서 갑과 을 모두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⑤ 학생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권리 행사는 이와 별도의 영역에 해당한다.

02~03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민 참여

기초 UP 개념 확인 문제

120쪽

01 × 02 ○ 03 × 04 × 05 ○
06 〈초·중등 교육법〉 07 교권 08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9 ㉡ 10 ㉠ 11 ㉢ 12 법령 13 사법

01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0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원, 공원, 가정, 사이버 공간 등에서 일어난 행위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04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도 부작용을 경험한다. 학교폭력 가해 과정에서 왜곡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징계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력 UP 단골 내신 문제

120~124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① 16 ③

서답형 문제

17 (1) 사이버 폭력 (2) 모범 답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1) ㉠ – 법조문, ㉡ – 판례, ㉢ – 입법자료 (2) 모범 답안 국민으로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파악하고 감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01 학교폭력의 의미 답 ②

ㄱ.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민법, 행정법을 근거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ㄷ.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바로잡기 ㄴ. 학교 공간에서만 일어난 폭력이 아닌 가정이나 학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도 그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간주한다. ㄹ.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이들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법적 분쟁에 관여하기도 한다.

02 학교폭력의 해결 답 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처분청인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① 의무 교육 대상 학생이라도 ㉠에 따른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 의무 교육 대상 학생(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② ㉠이 결정되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에는 가해 학생의 보복이 우려될 경우 영구적인 시설 보호가 포함된다.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는 가해 학생의 보복이 우려될 경우 일시적인 시설 보호가 가능하다.

④ ㉠과 달리 ㉡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포함된다.
→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공문서인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03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 답 ②

갑은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을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사법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이다. ② 을은 사법적 접근의 강제성과 사후 처방적 성격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고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택지 분석

① 갑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갑은 사법적 접근 방식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할 것이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
→ 갑은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
→ 갑, 을 모두 가해자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 모두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갑, 을 모두 가해 학생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04 학교폭력의 의미와 유형 및 해결 방법 답 ⑤

병. 당사자가 불쾌감, 수치심, 불안감 등을 느낀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정.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할 수 있다. 무. 피해 학생은 교사,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잡기 갑.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이므로 학교 공간 외에 공원, 온라인 공간, 가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법〉 외에 형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가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정 주체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이다.

05 학교폭력의 해결 답 ②

ㄱ. 기프티콘은 온라인 메신저에서의 결제 수단이므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ㄹ.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의 조치와 별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해 학생에게 물을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ㄴ. ㉡은 학교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교 공간에서만 일어난 폭력이 아닌 가정, 학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도 그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간주한다.

ㄷ. 갑은 교육장의 전학 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학교장 혹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6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 답 ⑤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한 기구이므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이다.
바로잡기 ③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을 경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보충+심화 학교 및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

- 초기 대응: 인지 및 신고 접수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즉시 분리 → 교육지원청에 보고
- 사안 조사: (필요 시) 긴급 조치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 전담 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요건 충족·동의 시) 학교장 자체 해결
- 조치 결정: (자체 해결 불가 시)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 →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장 조치 결정

07 학교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답 ①

ㄱ. 학교의 규칙은 학교 운영 및 학생 생활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 ㄴ. 교권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잡기 ㄷ. 학생도 한 명의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ㄹ. 학교 운영이나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08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 답 ③

을.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는 교육 분야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사회 전체의 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병.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 준법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바로잡기 갑.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정.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사법적 해결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화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나 대화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09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률 답 ⑤

(가)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는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교권에 대하여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이 있다.

10 교권 침해 행위 답 ④

교육부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교육 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공무 집행 방해나 부당한 간섭, 성폭력 범죄 혹은 성희롱, 불법 정보 유포 행위, 상해 및 폭행, 협박 및 명예 훼손, 손괴 등이 있다.
바로잡기 ㄱ. 갑은 학교 밖 청소년이며, 해당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11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답 ⑤

ㄷ. 우리나라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누리집에서는 자치 법규와 행정 규칙 등이 나와 있다. ㄹ. 생활 법령 정보 누리집은 개인의 법령 정보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누리집의 정보는 재판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의 근거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선택지 분석

ㄱ. 국가 간의 협정과 달리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령 중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국가 간의 협정 외에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에 포함된다.

ㄴ. 헌법, 조약, 법률, 대통령령은 법령에 포함되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령은 헌법, 조약, 법률,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외에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12 판례의 의미 답 ⑤

제시된 질문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을 재판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므로 판례를 검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례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3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답 ①

(가)에서 사법부가 내린 법적 판단이 판례이며, 판결과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나)에서는 법령, 조약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므로 법조문에 해당한다. (다)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원문,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및 국회 처리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입법자료에 해당한다.

14 판례 번호 답 ④

제시된 판례 번호에 따르면, 사건 재판 법원은 대법원이고, 선고 날짜는 2021년 2월 25일이다. 2017은 소송을 제기한 해이고, 다는 사건 부호이며, 226605는 사건 번호이고, 판결에 해당한다.

보충 ✪ 심화 판례 번호

판례 번호는 어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인지, 판결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사건 번호는 각 법원에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사건 번호를 보면 재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15 사회문제의 사법적 해결 답 ①

제시된 사례에서는 시민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잡기 ②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부와의 협력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지 않다.

16 사법적 해결 방식의 효용성과 한계점 답 ③

갑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을은 사법적 해결 방식만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회문제의 사법적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법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일 뿐 갈등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정치적 쟁점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도 오히려 입법 미비,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①, ② 사법적 해결의 한계와 관련 없다. ④는 사법적 해결의 효용성에 해당한다. ⑤ 입법이나 법 해석은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7 학교폭력

(2) [주요 키워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본인, 보호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채점 기준	배점
청구의 주체와 이의 제기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청구의 주체와 이의 제기 방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8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주요 키워드] 국민, 주권, 입법 과정, 감시

채점 기준	배점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 과정을 파악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급 UP 고난도 문제 125쪽

01 ① 02 ④ 03 ①

01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 답 ①

ㄱ. 출석 위원 13명 중에서 퇴학 의견은 7명에 불과하므로 의결 정족수인 2/3에 미달했는데도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로 위법이다. ㄴ.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 처분이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ㄷ. 퇴학 처분으로 인해 병에게는 헌법상의 교육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퇴학 처분으로 인하여 병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ㄹ. 병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한 폭력 행위를 의미하므로 갑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보충 ✪ 심화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 해결 유형

행정법적 해결	• 절차: 초기 대응 → 사안 조사 → 전담 기구 심의 → 조치 결정 •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민법적 해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 교사,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함.
형법적 해결	피해 학생 또는 이해관계인이 고소, 고발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은 형사 재판 또는 소년부에 송치됨.

02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문제 답 ④

ㄴ.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ㄹ. 특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선택지 분석

ㄱ. ㉠은 학생이 아니므로 ○○ 중학교에서 정한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학교 규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도와 안전 수칙 등과 관련해서는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

ㄷ. 을의 부모는 ㉡과 별도로 ○○ 중학교를 상대로 기소할 수 있다.
→ 형사 재판에서 검사만이 기소 권한을 가지므로 을의 부모가 기소할 수 없다.

03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방법 답 ①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시민 참여 방법은 국민이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다. 우리나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는 법 개정안과 현황, 관련된 청원 내용 및 회의록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

바로잡기 ② 학교 규칙이 아닌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③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률안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④ 판례는 사법부가 내린 법적 판단으로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 ⑤ 시민들이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시위나 국민 동의 청원 등의 사회 참여가 나타난 것이다.

단원 마무리 내신 실전 문제

126~12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⑤

서답형 문제

07 (1) 모범 답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이유로 가해 학생을 고소 혹은 고발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장 혹은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모범 답안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을의 관점에서는 갑의 관점에 대해 사법적 접근의 강제성과 사후 처방적 성격 때문에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01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답 ⑤

(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기초 자치 단체장이 발급한다.

선택지 분석

① (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한다.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인 사람(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다.

② (나)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17세인 사람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나)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므로 해당된다.

③ (가), (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 (가), (나) 모두 학생 신분 여부와는 관계 없다.

④ (가)와 같은 권리 행사의 제한을 수용한 청소년에게만 (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의무의 주체이므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수용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하여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02 청소년의 권리 보호

답 ③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의 인격권 및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선택지 분석

① ㉠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② ㉡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정책이다.
→ ㉡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치에 해당한다.

④ ㉣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책임에 반하는 정책이다.
→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은 이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⑤ ㉡, ㉣은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 ㉡은 학생·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은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03 학생·청소년의 권리

답 ⑤

ㄷ.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ㄹ.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바로잡기 ㄱ. 청소년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다. ㄴ.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다.

04 학교폭력 유형

답 ②

(가)는 금품 갈취, (나)는 따돌림, (다)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보충+심화 **학교폭력의 7가지 유형**

성폭력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폭행,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금품 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리고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 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고의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신체 폭력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신체 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언어 폭력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이나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 약점을 들추어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폭력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관해 비방, 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 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촬영하여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05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

답 ④

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밖 공간인 학원, 공원, 가정, 사이버 공간 등에서 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면 해당된다. ㄹ.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이들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한 합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가해 학생을 고소 또는 고발하면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선택지 분석

ㄱ. 학교폭력 행위를 규제할 때는 〈학교폭력 예방법〉만 적용할 수 있다.

→ 학교폭력 행위 규제 시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적용,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 행위를 고소 또는 고발하면 가해 학생이 형사 재판을 받기도 한다.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 심판법〉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ㄷ.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학교의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가해 학생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06 교권 침해 행위

답 ⑤

교육부가 안내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교육 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 행위, 공무 집행 방해, 부당한 간섭,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 정보 유포 행위, 상해 및 폭행, 협박, 명예 훼손, 손괴가 있다.

병, 정.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관련된 것이며, 교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

07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법적 조치 방안

(1) 〔주요 키워드〕 불법행위, 고소, 고발, 관리와 감독의 의무, 민사 소송,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의 단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조건〉의 단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조건〉의 단어를 두 개 이상 사용했으나 법적 조치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주요 키워드〕 강제성, 사후 처방적 성격, 피해 학생의 고통, 학교폭력 예방 한계

채점 기준	배점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법적 해결의 한계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법적 해결의 한계에 대해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memo

